



불평등 사회 속 공정 담론의 다차원성

청년 공정 관련 신문사설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곽영신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류용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The multi-dimensionality of fairness discourse in an unequal society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newspaper editorials dealing with youth-related fairness

Kwak, Youngshin*

(Ph.D. Student,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Ryoo, Woongjae**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utilizes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youth-related fairness discourse appearing in a series of newspaper editorials during the Moon Jae-in regime, from the beginning of his presidency.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how fairness discourse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labor, as a representative social resource distribution channel, is articulated in the public forum of the media. In particular, based on the diagnosis that the meaning of fairness discourse in Korean society is distorted upon the interests and goals of each class and groups, we tried to examine the complex and plural nature of the concept of fairness in a context-specific way. First, fairness discourse is embraced by the ideology of meritocracy that emphasizes the principle of equity and procedural fairness. However, this view can conceal injustice, resulting from structural discrimination and exploitation. Second, the media has expanded and reproduced the discourse of fairnes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pper class and the powerful. As a result, it justifies a 'winner takes all' logic and system of domination through existing competition rather than resolving structural injustice. Third, rather than presenting in-depth coverage of fairness discourse to the public, the media tends to serve and immerse itself in the interests of each political camp and use them as a political tool to amplify conflicts. Furthermore, since corruption and foul play are still prevalent in Korean society, the desire for meritocracy and fairness discourse is growing.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phenomenon of neo-nepotism due to the continuation of the meritocracy system is emerging in Korean society, there is still a social imagination and hope for the ideal meritocracy.

Keywords: meritocracy, fairness discourse, fairness principle, inequality, public sphere

* sampong6@naver.com, 제1저자

** wjryoo@hanyang.ac.kr, 교신저자

1. 들어가며

촛불 항쟁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내세우며 집권했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졌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통치를 앞세워온 전임 정권에서, ‘헬조선’ 담론을 유행시키며 한국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에 극도의 불만을 쏟아낸 청년층은 이 정부가 평등, 공정, 정의에 기반한 개혁 정책을 펼침으로써 자신의 현재 삶과 미래가 달라지길 기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노동, 교육, 주거(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은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개념은 뚜렷하게 합의되고 숙고되지 않는 ‘낯선’ 개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별히 공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들, 일례로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문제(2018.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2019.8~10),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건(2020.6), 공공의대 설립 반대 의사 파업 사태(2020.8~9), LH 투기 사건(2021.3), 페미니즘과 젠더갈등, 등에서 드러난 공정 담론은 정치적 지향과 계층, 성별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하고 이질적으로 다루어지고 해석되었다. 이해관계가 다른 각각의 집단은 공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판단하며 담론 투쟁에 활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화된 측면이 있다.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한 이후 이전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2030세대 젊은층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 담론은 다시 주목을 받았다.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의 공정에 대한 기준과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 기반의 상당수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특히, 20대 남성이 여당 지지에서 야당 지지로 대거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자, 남녀 성 차이에 따른 공정 논란도 불거졌다. 정부의 여성 친화적 태도 때문에 ‘이대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남성층이 기대하는 공정 개념을 선택적으로 활용한 30대 정치인 이준석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가운데서도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두루 합의된 공정 개념이 무엇인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공정 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공정 담론이 활용 및 전유되는 양상에 대해 김정희(2020)은 공정성이라는 가치 자체가 이해관계를 은폐하거나 진정한 논의 및 합의의 가능성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담론적 무기로서 기능한다고 분석한다(31-32쪽). 이는 그간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의 의미가 체계적으로 왜곡되어 왔고, 이 왜곡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며 특정 집단이나

목표에 영향을 끼쳤다는 진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무기화 현상'으로 인해 공론장은 성숙한 토론과 합의, 이에 따른 민주적 참여와 개혁보다는 집단이기주의 관철을 위한 이진투구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그러나 공정성의 원칙은 정치와 경제, 사회 측면에서 구성원의 통합과 갈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만약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원의 분배 기준 또는 절차에 대한 원칙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인다면, 그 분배에 따른 결과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성 원칙이 사회 내에서 공유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사회 연대의식이 약화되고 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되며 불평등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된다(이희정, 2018, 127쪽).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주된 관심사인 공정 담론이 사회 통합과 연대에 기여하고 불평등과 불공정, 불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생산적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공론장에서 공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석, 활용 및 전유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적 전망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권력층과 공중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는 언론에서 공정 담론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담론의 성숙과 발전 방향을 고찰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이후 신문사설에 나타난 청년 공정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 담론의 복잡성과 모순성을 살펴보고, 그 특징과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청년과 관련된 공정 담론을 살펴보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 시기가 생애 주기에 따른 주요 인생 과업인 '대학 입시', '취업' 등과 마주치는 때이므로, 이를 통해 대표적인 자원 및 기회 배분 통로라 할 수 있는 교육, 노동 분야의 공정성 원칙을 탐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이론의 검토: 공정의 다양하고 복잡한 얼굴

1) 공정성의 다차원적 원칙들

'공정(公正, fairness)'은 사전적으로는 '공평하고 올바르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다. 어떤 이들은 '공정' 개념을 '정의'와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를 자원 배분의 격차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으로 보거나, 혹은 불평등한 상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즉, 공정성 개념은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요소가 중첩돼 있으며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내에서

상호 이접하고 충돌하면서 작동한다. 그러므로 공정 개념은 절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공정성은 사회 내에서 다른 지위와 자격을 가진 구성원들에 의해 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들에 대한 숙의와 협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정성 논의도 정치·사회적 맥락, 구성원의 입장이나 위치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규정 및 재규정될 뿐 아니라 종종 상당한 수준의 충돌과 오인, 접합과 의미화 과정을 겪게 된다.

그간 사회과학에서 보상의 분배 과정과 결과에 대해 논의된 공정성 관련 이론은 크게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과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 이론으로 나뉜다(이희정, 2018, 126쪽). 먼저 분배공정성 이론은 사회와 집단 내에서 보상이나 권리, 책임, 부담 등이 분배되는 규칙이나 규범이 무엇인지, 사회 구성원이 특정한 분배 원칙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논의한다. 이때 분배 공정성의 원칙으로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기준은 ‘형평(equity)’ 원칙, ‘평등(equality)’ 원칙 그리고 ‘필요(need)’ 원칙이다(박효민·김석호, 2015, 245쪽).

이중에서 형평 원칙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그 사람의 재능과 노력, 훈련에 따라 집단의 성과물을 산출하는 데 기여한 비율에 비례해서 분배되면 이를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능력과 노력, 성과 등의 차이를 반영한 자원의 분배 격차는 공정하다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평등 원칙은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 등을 주로 고려하기보다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자원이 균등하게 분배되고, 이들이 동등한 생활 조건을 갖게 되면 공정성이 확보된다. 마지막으로 필요 원칙(need rule)도 능력, 성과 등과 상관없이 개인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을 배분할 때 공정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더 배려를 받고 특별한 지원과 혜택을 받는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분배 공정성의 원칙들은 현실 세계에 실제 적용될 때 각기 다른 효과를 산출한다. 형평 원칙은 주로 개인의 성과가 중시되는 경쟁의 상황에서 강조되고 이런 성격의 집단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긴다. 반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구성원들의 상호 연대와 존중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평등 원칙은 집단 내 연대 의식과 협력 분위기가 강한 곳에서 중시되고 이런 성격의 집단은 조화와 화합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필요 원칙은 집단 구성원 간에 친밀성과 상호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중시되는데, 이런 집단의 주된 목표는 개인의 행복이 된다(정이환, 2009, 194쪽). 이처럼 공정성의 원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공정성을 누가 판단하는지,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떤 거시적 문화 및 제도 속에서 해석되는지에 따라 공정성의 성격은 달라지게 된다(박효민·김석호, 2015, 247쪽). 공정성 원칙은 이처럼 상황 의존적이고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

원들은 공정성 원칙을 절대적, 배타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상대적이고 복합,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은 분배 공정성이 보상의 분배 결과에만 주목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배 과정의 공정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절차 공정성 원칙은 분배의 결과가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서 도출된다면, 사회 구성원이 불평등한 분배 결과도 수용하며 공정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절차적 공정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보상의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성원에게 보상 분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구성원들이 보상의 분배가 절차적으로 공정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분배를 결정하는 권위를 가진 대상이 각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하며, 집단이 개인을 한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느낌, 즉 집단으로부터 자신의 권리와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분배를 결정하는 권위 체제가 정직하고 편향되어 있지 않으면서 일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박효민·김석호, 2015, 241-243쪽). 한편, 절차의 공정을 강조하는 것은 절차 자체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쟁의 구조와 분배 결과에 대한 논의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평등과 정의를 공정성과 연결시키는 관점이 간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혜정, 2019, 860쪽).

정치철학에서 공정의 속성은 정의의 문제와 연결지어 논의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존 롤즈(John Rawls)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정의관을 통해 정의 개념에 있어 기본적인 관념은 공정이라 밝히고 이 관점에서 정의를 분석했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로 꼽히는 롤즈는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했는데, 그에게 있어 절차 공정성은 합의 당사자들이 원초적 입장에 놓여있을 때만 가능해진다. 여기서 원초적 입장이란 사회적 지위와 정신적, 신체적 능력, 성격, 가치관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무지의 베일’에 싸여있는 상태다. 즉, 롤즈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에게 유리한 배경과 원칙을 선택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상태에 놓이는 가상적 조건이 될 때에 비로소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진화, 2016, 79쪽).

이를 바탕으로 롤즈의 정의의 원칙을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 원칙’으로, 이는 정치적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 등이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한 기본적 권리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원칙’으로 이 원칙 중 첫째(2-a)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 둘째(2-b)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책 및 직위에 대한 공정한 기

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Rawls, 1999/2003, p. 400). 이 원칙에 따르면 모든 자원은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배분해야 한다(정진화, 2016, 81쪽). 이는 다시 말하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한 어떤 불평등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롤즈의 정의 원칙에서 최소 수혜자란 미숙련 노동자와 같은 특별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들 보다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상대적인 소득과 부를 기준으로 하여 중간 수준의 소득과 부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 및 계급적 기원이 불리한 사람들, 천부적 재능 면에서 불리한 사람들, 살아가면서 운조차 따르지 않은 사람들 등을 말한다(정진화, 2016, 82쪽). 이들에게 자원의 합당한 몫을 배분하기 위해 롤즈는 개인의 능력은 우연적 요인에 원인을 두고 있는 바가 크다고 여기고, 이를 개인의 자원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능력에 따른 차이는 사회 전체를 위해,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롤즈의 주장이다(이혜정, 2019, 861쪽).

물론, 롤즈의 평등한 자유주의적 공정 및 정의관도 한계를 지닌다. 가령,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정의 원칙에 대한 합의에 따라 경제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 방식을 교정하는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다. 즉,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이 인종, 젠더, 계급 구조와 같은 심층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차별 인식과 편견, 여기서 기인하는 비가시적인 억압과 부정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분배적 정의의 차원 바깥에 자리하는 억압과 부정의를 다루기 위해 ‘인정’의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재분배와 인정의 차원을 결합한 새로운 정의론을 구상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자유주의적 정의가 주장하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자원 분배의 문제와 문화적 차원의 인정의 문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경제적 재분배와 별도로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집단들의 인정 투쟁에 주목했다(이충한, 2016, 317쪽).

이처럼 재분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그와 같은 단순한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인정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시각은 의미가 있다. 한 사회에서 기본적 자유와 균등한 기회 보장 같은 규범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무시와 멸시, 불인정이 지속된다면 그 사회가 가진 공정과 정의의 체계는 결과적으로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충한, 2016, 321쪽). 우리 사회가 이 같은 인정 차원의 부정의에 주목한다면 공정의 다차원적 속성은 한층 더 복잡성을 띠게 된다.

2)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와 공정

공정 담론은 능력주의(meritocracy) 이데올로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능력주의는 출신 배경이 아니라 지능과 노력, 곧 능력에 따라 차등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 분배가 이루어지는 체제를 의미한다(남미자·배정현·오수경, 2019, 135쪽). 능력주의라는 말은 원래 1958년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Michael Young)이 〈능력주의의 부상〉이라는 공상소설에서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강조할 때 오히려 극심한 불평등을 낳는 모습을 묘사한 풍자어로 처음 사용했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이후 영미권에서 귀족주의에 대항하는 진보적 이념으로 평가되며, 세습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또 능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이 강조되는데, 이는 능력을 기반으로 한 성과에 따른 차등을 공정한 분배로 인식하게 했다. 정리하면 능력주의는 앞서 공정성의 ‘형평 원칙’과 ‘절차적 공정성’을 극대화해 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습 귀족주의에 대항하고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능력주의의 장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능력주의가 지닌 맹점과 내재적 한계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먼저 능력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이 온전한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만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현실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능력과 노력 외에도 다른 많은 요소가 경쟁의 승패와 성과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맥나미와 밀러는 능력을 이겨버리는 비능력적 요인들로 “차별적 교육기회, 불평등한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특권의 상속과 부의 세습, 개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인들, 자영업자의 자수성가를 방해하는 대기업, 편견에 의한 차별 등”을 꼽았다(McNameee & Miller, 2004/2015, p. 328). 이처럼 단순한 능력주의 관점은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온전히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의해 얻어진 능력을 구별해 측정하기 어렵고, 능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조건이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기도 어렵다.

능력주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설사 이상적인 능력주의가 실현돼 순수하게 능력과 노력으로만 평가받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능력주의의 내재적 특성상 결국 심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능력주의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력에 따른 ‘차등’을 강조하므로, ‘사회적 이동성’과 ‘평등’이란 가치에 사회가 필요한 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즉, 능력 있는 자들이 사회 자원을 독식하고 이를 자녀에게 세습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배제와 소외를 정당화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능력주의 비판을 대중화한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은 ‘능력주의의 폭정’이라 일갈한다. 그는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재능과 노력을 보상하는 체제라고 생각하는 건, 승자들이 승리를 오직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라고 여기게끔 한다. 그리고 그보다 운이 나빴던 사람들을 깔보도록 한다. (...) 일자리가 없거나 적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나의 실패는 자업자득이다. 재능이 없고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헤어나기 힘든 좌절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이 오히려 정당하게 여겨지고, 그에 대한 저항이 사라지며, 불평등은 더 심해 진다는 것이다(Sandel, 2020/2020, pp. 52-53).

같은 맥락에서 마코비츠(2020) 역시 저서 <엘리트 세습>에서 능력주의의 폐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 대표적인 논점은 능력주의는 초기 등장할 때 의도와는 달리 사회 전반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엘리트 대학 졸업자들이 최고 직업을 독점하는 동시에 초고속런 근로자에게 유리한 신기술을 고안해 최고 직업은 더 훌륭해지고 나머지 직업은 더 열악해진다. (...) 이와 같이 능력주의는 교육과 직업 사이의 되먹임 고리를 만들어내며 그 고리 안에서 개별 분야의 불평등과 다른 분야의 불평등을 증폭한다”(Markovits, 2019/2020, p. 84). 이처럼 능력주의는 최상위 엘리트에게 기회와 자원을 집중시켜 중산층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소득과 가치를 초상류층으로 이전시키고 중산층의 몰락을 가속화한다. 또, 능력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으리라 여겨지는 최상층부 엘리트층도 끊임없는 노동과 자기 착취로 더욱 불행해져 결국 어느 계층도 이익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다(Markovits, 2019/2020, p. 97).

이외에도 능력의 ‘추상성’ 역시 생각해 볼 문제다. 능력주의는 능력과 노력에 따르는 보상을 공정한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능력 또는 노력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에서는 교육수준, 숙련, 기술, 전문성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고, 잠재력 역시 능력으로 간주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능력이 노동생산성과 같이 기업의 이윤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요소인가를 잣대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인들의 사회적 기여를 생산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의 기여도가 무시되기 때문에 너무 협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센텔이 지적하듯 “돈을 잘 버는 일은 그 사람의 능력과도 무관하고 그가 한 기여의 가치와도 무관하다”(Sandel, 2020/2020, p. 225). 그런 점에서 능력에 따른 보상은 개인들의 사회적 기여를 매우 파편적으로 평가하며, 그것만으로 사회적 보상의 공정성을 논하게 되는 편협함을 낳을 수 있다. 이처럼 능력주의의 맹점과 한계에 제대로 주목하면 단순히 능력주의 원칙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며 과도한 차등을 주는 행위는 합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능력주의보다 더 진화한 형태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자원배분 원리가 필요한 것이다.

3. 연구방법과 대상: 신문사설의 비판적 담론분석

이 연구는 분석 대상인 텍스트와 사회 및 이데올로기의 상호연관성을 드러내는 비판적 담론분석 방식을 따른다. '담론분석'은 상징적 매개를 통한 사회적 행위와 그것의 물질화된 산물인 텍스트를 분석하여,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 사회구조의 질서와 변동을 이해하려 하는 접근법이다(신진욱, 2011, 11쪽). 더 나아가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은 보다 거시적인 사회정치적 담론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담론권력이 작동하는 현실적 기제와 그 사회적 기능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집중하며, 담론의 물질성과 사회적 환경, 행위로서의 담론,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을 보다 중요시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따라 비판적 담론분석은 담론과 권력불평등 간의 쌍방향 관계를 규명하는 '권력으로서의 담론', 사회정치적 실천으로서 담론 질서의 역사적 변화를 규명하는 '행위와 투쟁으로서의 담론',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담론이 어떤 권력 효과를 낳는지 주목하는 '맥락의 중요성', 비언어적 형태의 사회구조와 사회적 갈등의 맥락 속에서 특정 담론의 생성·재생산·위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담론의 사회적 환경'을 강조한다(신진욱, 2011, 12-15쪽).

담론과 사회 변동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텍스트와 사회적 실천을 연결하는 통합적 연구방법으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제안한 페어클라우에 따르면 담론은 텍스트(text),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 그리고 사회문화적 실천(sociocultural practice)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돼 있다(김영옥·함승경·김영자·최지명, 2017, 43쪽). 여기서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효과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어휘, 문법, 결속성, 텍스트 구조와 같은 언어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담론적 실천 분석은 개별 텍스트들이 생산, 분배, 소비되고 또는 텍스트들이 서로 결합해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본질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담론은 이 담론적 실천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재생산되고 이데올로기와 권력 관계를 일상화시키므로, 담론적 실천 분석은 그 담론화된 이데올로기와 권력 관계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비판하는 것이 된다. 특히, 여기서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 강조되는데, 이는 특정 텍스트 속에 다른 텍스트 요소와 의미가 상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실천은 텍스트가 담론적 실천을 통해 거시적인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위치에 존재하고 또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정치적 실천으로서 담론은 권력 경쟁과 투쟁의 장이며, 권력을 향한 헤게모니의 경쟁은 담론을 관습적 또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재구성하면서 이데올로기를 일상화시킨다. 따라서 비판적 담론 분석은 텍스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탈일상화하고 이를 통해 권력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밝혀내는 것

이다(김영욱·함승경·김영자·최지명, 2017, 44쪽). 이처럼 비판적 담론분석은 텍스트의 미시적 차원을 바탕으로 거시적 사회구조의 차원까지 분석해낸다는 점에서 담론과 사회의 관계를 드러내고 고찰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의 중요한 이슈나 의제들을 다루는 대중매체에서 담론이 어떻게 생성되고 전달되며, 사회적 영향과 과장을 미치는지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때 비판적 담론분석은 대중매체의 이념적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대중매체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며 이념적 차원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검토하게 한다. 즉,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대중매체 담론의 텍스트가 어떻게 구조화되며, 지배적 이념을 지지하고 또는 그에 도전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이지영, 2019, 48-49쪽).

특히, 신문기사 중에 신문사설은 특정 사안 또는 쟁점에 대해 가치 평가적인 견해나 주장을 통해 독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형태의 뉴스로 언론사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 이슈를 각색한다는 점에서 일반 뉴스와는 차별화된다(이지영, 2019, 48쪽). 신문사는 신문사설이라는 공인된 공적 담론을 통해 자신들의 이념을 정당화하고 확산시킴으로써 보수, 또는 진보와 같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동시에 재생산하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나 이념을 독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 주입하기 위해 과장적 표현, 은유 등과 같은 화용적, 담화적 자질들을 이용한 설득전략을 구사한다(이원표, 2005, 146쪽). 이에 따라 신문사설이 형성한 담론은 각 신문사의 견해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일정한 색깔을 갖는다는 점에서 대중의 인식 및 이념형성, 대중의 여론형성, 행동촉진,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지영, 2019, 48쪽).

전술한 문맥에서 본 연구는 신문사설에 나타난 공정 담론을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빅카인즈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2017년 5월 10일~2021년 6월 30일)까지 주요 신문 사설 중 ‘청년 + 공정’ 단어로 검색된 사설을 취합해 분석했다. 검색 결과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주요 일간지 10곳에서 126건의 사설이 검색되었다. 2018년 이전 조선일보 기사가 빅카인즈에서 검색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조선 홈페이지에서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2건의 사설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비판적 담론분석의 맥락을 따라 대중매체인 신문사설에서 공정 담론의 미시적 측면에서의 텍스트가 거시적 측면에서의 담론적 실천과 사회문화적 차원과 어떻게 접합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이를 위해 우선 확보한 사설 전편을 모두 면밀히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 이후 불거진 주요 청년 공정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사설을 선별해 세부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기간 중 ‘청년 공정’ 관련 사설이 가장 많이 보도된 시기(월별)를 보여주는 빅카인즈 ‘키워드

트렌드' 분석 결과를 참고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10월 8건(주요 주제 : 공공기관 채용비리), 2018년 1월 6건(공공기관 및 민간은행 채용비리), 2018년 10월~11월 12건(공기업 고용세습), 2019년 9월~11월 12건(조국 사태), 2020년 6월 5건(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020년 9월 13건(문 대통령 '청년의 날' 연설,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 2021년 6월 16건(민주당 조국 사태 사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등이다. 이에 더해 최근 공정 담론이 주목받으면서 사설뿐 아니라 외부 기고자가 참여한 오피니언란에서도 관련 주제가 활발히 논의되는 것을 감안해 일부 외부 기고 칼럼 역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최근 들어 20-30대 청년들에게 '젠더' 문제 역시 공정과 관련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나, 아직 청년 공정과 관련한 신문 사설에서 주요 주제로 다뤄지지 않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참고로 여기서 '청년'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젊은 세대의 개념과 특징을 대상화하는 단순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그간 이루어진 주류적 청년세대 담론은 청년을 계도나 책임의 대상이 되는 '비주체'로 그려내거나, '청년다움'을 갖춘 주체로서만 소환하고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선기, 2016, 55쪽). 청년세대 담론이 젊은 층을 특정한 정치적 주체로 소환, 혹은 설정하거나, '청년세대'라는 기호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나 욕망을 표현하면서 대중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청년과 청년세대¹⁾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청년 시기에 주로 수행되는 인생 과업인 대학 입시, 취업과 관련한 주제를 맥락화해 탐문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교육 및 노동 문제에서의 공정성 담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소득과 자산, 교육과 노동시장, 주거 등의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과거 어느 정도 열려있던 일체의 기회마저 차단되는 '장벽사회'의 문턱에 다가선 가운데, 이러한 조건의 변화는 과거의 청년보다 오늘날의 청년에게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승연·박민진, 2021). 그러므로 현재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직접적이면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청년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자원 배분의 주요 메커니즘이자 사회 전 세대의 일상과 긴밀한 연관을 맺

1) 이에 관해 최근 활발한 사회적, 학문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세대는 사회학자들이 계급이나 계층처럼 빈번하게 사용하는 개념으로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주장이 그 중 하나이다. 특히, 특정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00세대" 식으로 하나의 범주로 묶고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다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이른바 '세대론'이 그렇다. 또한, 세대교체를 통한 사회변화는 대개 점진적이고 연속적인데, 이를 임의적 세대 구분의 렌즈로 보면 그 차이가 더 크고 단절적으로 보이는 착시현상도 일으킬 수 있다. 더불어, 이는 세내 내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념, 취향과 성향의 차이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임채운, 2021. 07.19). 다만, 계급이나 계층이란 분석 단위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듯, 청년세대란 단어가 가진 인식론적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유의미한 사회과학적 분석 단위와 개념으로 이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석적 미덕 또한 자명하다.

고 있는 노동, 교육 분야의 공정 담론의 여러 형태를 다층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긴요한 일이다. 또한, '청년'은 세대적 특성이 아직 유동적이거나 불확실하고 그들 자신의 권력자원이 약하기 때문에, 종종 기성세대 엘리트 집단이 세대 프레임을 동원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세대게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신진욱·조은혜, 2020, 57쪽).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이 '청년 + 공정'의 조합으로 청년세대를 활용해 공정 관련 담론을 펼치면서, 정작 공정의 어떤 차원을, 어떤 방식으로 강조하거나 은폐하는지, 혹은 청년을 위한 공정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그 담론이 실제로 어떤 집단의 이익, 또는 가치에 복무하고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 공정 담론에 대한 탐색은 단순한 '세대 담론'을 넘어 공정과 관련해 한국 사회 전반에 드리운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발견과 대안 모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능력주의에 포섭된 납작한 공정

2020년 6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인 보안검색원 1902명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세간의 논란에서 가장 핵심이 된 키워드는 단연 '공정'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안에 대해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낸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부터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스펙을 쌓은 뒤 다시 밤낮없이 공채 시험을 준비해 입사할 수 있는 곳이 인천공항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험(능력과 노력의 증명)과 같은 공채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참여 인원 35만 명이 넘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 국민청원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은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입니까?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기는커녕 시험도 없이 그냥 다 전환하는 게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로또'라고 폄하하고, 공사 입사를 위해 시험공부를 하거나 스펙을 쌓을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로 SNS 상에서 '부러진 펜'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전형적인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청년세대 내부에서 다소 극단적인 양상이긴 하지만, 상당히 침투하고 전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우리 사회 교육과 노동 분야에서 인재선발과 자원배분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원리는 (객관식) 시험으로 능력을 측정해 줄 세우기로 변별하고, 그 선발 과정의 객관성과 투

명성을 확보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 사회의 여전히 많은 대중이 수능과 공채, 고시제도를 선호하고, 점수, 스펙, 서열과 같은 기준을 신뢰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이 기준에서 볼 때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은 이 원칙을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례로 다음의 사실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원칙이 없고”, “우연에 의해”, “특혜”, “우회하는 옆문”과 같은 부정적 표현들을 사용해 공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비합리적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 짓고 있다.

“분노의 출발점은 공사의 정규직화가 원칙이 없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이다. 당연히 채용시험을 봤다 떨어진 사람도 많다. 그런데 특정 시점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공개 선발 과정 없이 정규직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논리다. (...) 그 좋은 일자리에 갈 사람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정규직화는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하지는 것이지, 특정 사람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라면 우선 전환 대상 자리를 정하고, 외부에도 문호를 연 공개 채용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일보 (2020.6.26.) ‘정규직화가 왜 나쁘냐’고 오도할 일 아니다.〉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은 왜 누구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고, 다른 누구는 그 경쟁을 우회하는 옆문으로 들어가느냐는 것이다. 이런 일이 거듭되니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2020.6.27.) 정권 인사들 말장난에 농락당하는 公正과 正義〉

그러나 공정성의 형평원칙과 절차적 공정을 극단화한 능력주의만을 잣대로 공정을 결론내리는 것은 담론적 실천 차원에서 공정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무시하고 ‘납작한 공정’에 머무는 결과는 낳을 수 있다. 우선 앞서 제기한 능력주의의 맹점과 폐해, 즉 비능력적, 우연적 요소의 개입, 능력의 추상성, 불평등 강화 및 정당화 등이 그대로 현실에 나타난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라는 비능력적, 우연적 요소를 보면, 능력주의는 고소득·고학력 부모의 자녀가 풍족한 지원을 바탕으로 명문대에 들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학벌과 스펙 자원을 취득하고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로 고소득 지역인 서울 강남구와 저소득 지역인 강북구 학생의 지능, 노력, 유전 등 잠재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둘 사이 서울대 추정 합격률은 1.7배 차이가 났지만 실제 서울대 합격률은 20배 넘게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직·류근관

손석준, 2015, 372쪽). 부모의 소득 수준이 학생의 잠재력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그들의 능력을 '치장(사교육, 선행학습, 특수고 진학)'해 준 것이다. 능력의 추상성을 봐도 능력주의는 재능과 노력의 기준을 공채(시험점수)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동안 성실하고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해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숙련도와 헌신, 성실성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능력주의 원칙은 또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은폐한다. 대표적으로 한국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극심한 격차를 들 수 있다.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 2000여만 명 가운데 대기업, 정규직에 근무하는 1차 노동시장 종사자는 10.7%에 그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은 낮다(장근호, 2019, 81쪽). 그런데 통계청의 '2018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노동자의 월 평균소득은 501만 원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231만 원으로 대기업의 46% 정도에 불과했다. 또 하청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역시 340만 원으로 원청기업 545만 원의 62.4%밖에 되지 않았다(한국노동연구원, 2018, 132쪽).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61만 원인 데 비해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164만 원으로 정규직의 45.5%에 머물렀다.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더 짧다는 것을 고려해 시간당 임금을 보아도 정규직은 2만2193원인, 비정규직은 1만5472원으로 큰 격차가 났다.

일자리 별로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큰 이유는 개인별(인적자본), 기업별 특성(생산성) 차이에 '차별'까지 더해져 이중으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문영만, 2019, 60-62쪽). 또한, 대기업(원청), 중소기업(하청) 간 불법파견, 납품단가 인하, 기술 편취, 시장 독과점과 같은 불공정 거래 요소도 기업 경쟁력과 임금 격차를 낳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노동시장의 격차는 안전망과 복리후생의 영역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고용노동부의 '2019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서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고용보험은 94.4% 대 74%, 건강보험 98.2% 대 64.2%, 국민연금 98% 대 61% 등으로 비정규직의 혜택이 크게 떨어진다.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를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도 심각하다. 고용노동부가 2013~2018년 동안 3명 이상 노동자가 사망한 재해발생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망자 109명 중 하청노동자가 93명으로, 그 비율이 85%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 데도 노동조합 가입율은 정규직이 12.9%인 반면 비정규직은 0.7%로 거의 조직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를 보면 한국 사회가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공정은 단순한 능력주의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다. 능력주의는 재능과 가정배경, 운(運)의 불균등한 분포라는 선제 조건에 무심하며, 이미 불합리하게 격차가 벌어진 구조적 불평등·불공정도 고려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불행도, 여성·장애인이거나 성소수자가 사회에서 겪는

유무형의 차별과 배제도,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하청·비정규직이어서 겪는 부당함도,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거래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 저임금을 전전하는 중소기업의 처지도 잊히고 만다. 일례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고용 불안정이라는 손해를 보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 오히려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게 보다 공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 공론장에서 이처럼 다차원적 공정 담론은 제대로 설 자리가 없다. 한 예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일부 대중의 분노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금 더 배워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2배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대중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엔 불편한 내용일 수 있지만, ‘한국 노동시장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노동시장 내 격차가 어느 정도인 것이 더 공정한가?’에 대한 후속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언론의 빈정거리고 외면 속에서 깊이 있는 논의로 발전하지 못했다.

“지금 인터넷에선 이 의원을 향해 “표 좀 더 받았다고 국회의원 세비 받는 것이 불공정” “손흥민이 축구 좀 잘한다고 조기축구 회원보다 돈 더 받는 건 불공정”이라는 등의 냉소가 쏟아졌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불과 1523표 앞서 당선됐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겨우 1.7%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자신은 온갖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되고 패자는 아무것도 없는 승자독식은 뭐냐. 불공정의 극치 아닌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말장난이 빚어내는 자가당착이다.”

〈조선일보 (2020.6.27.) 정권 인사들 말장난에 농락당하는 公正과 正義〉

‘공정’ 개념은 재화와 기회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합리적 자원 배분을 가로막는 구조적 억압과 착취, 차별을 초래하는 제도에 대한 성찰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 노동 분야에서 일정한 능력을 측정하고 입시 및 채용 절차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정 담론이 거기에만 몰두하면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시스템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공정을 놓치기 쉽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천공항의 정규직화는 차별적인 비정규직 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볼 수도 있다(김범수, 2020.7.14.). 그러므로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기회와 자원 배분 차원에서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능력주의가 가리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의 공정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 담론에서는 무엇보다 능력주의가 능력자를 지나치게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나머지, 합리적인 차등을 넘어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차별하는 데까지 쉽게 나아가는 체제라는 사실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특정한 능력 측정 등에 따른 차별과 멸시, 착취, 기만 등이 정당화되고 덜 가진 자와 덜 유능한 자가 제 몫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은폐되고 있으므로, 공정 담론은 이러한 부정을 적극 폭로하고 이를 극복 및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 담론에 있어 '우리의 격차가 과도하지 않은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격차가 허용되는가?',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공정 담론은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원 배분에 있어 합당한 제 몫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자존감을 존엄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문화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되고 성숙해나가기야 한다.

5. 승자독식 지배체제의 정당화

2019년 여름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의 표창장 위조, 논문 저자 끼워 넣기, 스펙 품앗이 등의 혐의는 법적 유무죄와는 별개로 우리 사회의 극심한 경쟁교육, 과잉 능력주의, 배타적 가족주의, 승자독식 문제와 여기서 승자가 되고자 하는 중상위 계층의 자본 및 지위 세습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공중들은 한국 사회의 '엘리트층', '부자'들과 '서민'들 사이에 엄청난 교육 기회의 격차가 존재하고, 이는 고스란히 자산 및 지위 세습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독재 권력에 맞서 민주화에 기여해 온 '586 민주화 운동 집단'이라고 해서 비판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동안 공정과 정의, 평등을 외치던 인사들이 지식 교육과 자산 축적에 있어서는 그들이 적대시하던 보수 부유층 인사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위선이라는 비판에 맞닥뜨리고 이는 강한 수준의 국민적인 배신감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므로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와 교육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까지 나아가야 하는 중요 사안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공정 담론 역시 능력주의에 기반한 절차적 공정의 수준, 그리고 조국 개인과 일가의 일탈을 비난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교육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제기와 대안모색까지 나아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오히려 서울 명문대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정 담론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조적 불공정 해소가

아닌 기존의 경쟁과 승자독식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 <고려대·서울대생 1000여명 성난 촛불 “조국 딸 진실일” “조국 교수 사퇴하라”>(2019.8.23), 한겨레 <고려대생 500명·서울대생 500명 집회 “조국 딸 입학 특혜 진상 규명을”>(2019.8.23.) 등의 보도들은 서울대·고려대 등 일류대 학생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공정한 기회’, ‘노력’, ‘능력’ 등을 주장하는 발언들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가치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공정 담론이 ‘능력 있는’ 혹은 ‘선택 받은’ 대학생들의 입장만을 담아내면서 지방대 학생, 비 대학진학자 등 다른 사회 구성원, 특히 교육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개념과 가치는 소외,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조국 사태를 두고 온 한국 사회가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듯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누구를 위한, 어떤 정의와 공정인지, 혹시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학생들 그리고 향후 좋은 일자리와 지위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다툼은 아니었는지 곱씹게 된다.

다음 사설 역시 “토론회에 나온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의견을 소개한 후, 바로 “대학생들은 공정이 무너졌다고 했다”고 서술하며, 일부 엘리트 대학생의 목소리를 일반화하고 과잉대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경향신문 사설은 “명문대생들”과 “대학 미진학 청년들”의 목소리를 구분해 소개하고, 두 집단의 공정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과 반응을 통해 “계급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는 학벌자본에 따라 주체가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고, 그 위치에 따라 공정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토론회에 나온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법·정의에 엄격해야 할 법무장관이 법의 허점을 잘 이용한 모습에 분노한다”고 했고 “진보임을 표방한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는 등의 학생들 발언이 쏟아졌다. 대학생들은 청년층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회의 공정성’이란 가치가 조국 일가에 의해 무너졌다고 했다. (...) “용 말고 봉어 개구라 가재로 살라”고 하던 조 장관이 자기 자녀는 온갖 반칙을 다 써가며 ‘용의 코스’를 밟게 했다.”

(조선일보 (2019.10.14). 조국 사태는 ‘진영’ 아닌 ‘정의’ 문제라고 분노하는 청년들.)

“중층적인 조국 사태에 우리가 얼마나 단선적으로 대응했는지는 두 청년 집단의 반응에서 알 수 있다. 이른바 명문대생들은 조국 딸 입시에 대한 전면조사와 조국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대학 미진학 청년들은 “논문이니 입시제도 같은 것은 딴 세상 이야기다. 아무리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출발선에 분노한다”고 외쳤다(경향신문 ‘90년생 불평등보고서’ 기획). 계급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학벌 사회에서 조국 딸과 유사한 지위인 명문대생들은 조국사태에서 불평등을 지적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일탈적인’ 조국 딸과 ‘정당하게 합격한’ 자신들 간의 차별화 차원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대의에 입각한 문제 제기 성격도 있었을 것이다.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게 조국사태는 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평등의 상징이었다. 좁힐 수 없는 큰 격차에 절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 (2020.1.1). 특권과 차별 없는 공정 사회를 소망한다.〉

실제로 교육 공정 담론에서 한국 교육현장에 구조적 불공정이 팽배하다는 사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다. 대표적 사례가 대학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즉 정부 재정지원의 격차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2021)’ 보고서에 나온 2019년 전국 대학(4년제 198곳, 전문대 136곳)의 ‘일반지원금(학자금과 국공립대 경상비 지원 제외)’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대의 평균 지원액은 대학당 225억 원이었지만 지방대는 121억 원으로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격차를 보면, 수도권대의 연구개발 지원액은 149억 원인데 반해 지방대는 52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몰리는 이유는 능력주의에 따른 ‘선택과 집중’, 절차적 공정인 ‘평가와 경쟁’을 통한 선별적 차등지원 방식 때문이다. 스카이 대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때부터 엘리트 교육기관으로서 집중 지원과 특혜를 받은 역사가 있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대학재정 지원제도가 획일적 평가를 통한 한 선별 및 차등 지원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독점적인 혜택을 누렸다. 그러므로 스카이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은 대학 교육 여건의 구조적 불공정을 드러내고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역진적 배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대학의 재학생들은 국비지원금을 편중 지원 받음으로써 그렇지 못한 다른 대학생보다 우월한 교육 여건에서 공부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더 높은 경쟁력과 교육성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방대생들은 합당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더 열악한 교육 환경에 몰리고 배움과 취업을 위한 성취와도 멀어지게 된다.

이처럼 교육 시스템 속 불공정을 보지 못하면 기존의 경쟁 및 승자독식 지배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수박 겉핥기식’ 개혁을 추진하는 데 머무르게 된다. 조국 사태 이후 교육 공정성이 화두가 되긴 했지만, 이는 결국 일부 대학 입시에서 수능 정시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선에서 그치게 되었다. 실제로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으로, 정시전형 확대 정책을 통해 추가로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625명뿐이다. 이는 2023학년도 수험생 38만8천 명 중에서 겨우 1.4%에 불과한 숫자다. 서울 ‘주요 대학’을 지망하는

소수 상위권 학생들의 이야기일 뿐 대다수 중하위권 학생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인 것이다(최원형, 2019.11.29.).

능력주의, 과잉경쟁, 승자독식의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언론의 공정 담론은 노동 분야에서 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할당제 폐지’, ‘기업 규제 완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반대’, ‘공공 일자리 반대’, ‘노조 기득권 반대’ 등의 주장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기존 노동 시장의 비합리적인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기업의 과도한 자유를 제한하며,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행위를 오히려 불공정한 것으로 치부하는 행위이다. 다음과 같이 “청년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테니 공정한 운동장에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리게 해달라”는 주장은 매우 도발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길을 찾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나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주장이다.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 안팎을 오르내리고 구직 포기자까지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20%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은 울타리를 쳐놓고 청년들의 구직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런 민노총이 정의, 공정을 입에 달고 산다. 민노총에는 최근 새 조합원이 크게 늘고 있다. 민노총이 최고 권력임을 알아차린 것이다.”

〈조선일보 (2018.10.27.) 민노총 압박으로 공개 채용 1.5%, 청년 취업 원천 봉쇄.〉

“이번 여론조사에서 청년들은 새로운 청년 일자리 해법을 요구했다.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18~29세 청년들은 ‘벤처 및 신산업 육성 지원’(29.7%)과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29%)를 꼽았다. 전체 응답자는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37.6%)가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청년 일자리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20대 청년은 8.4%뿐이었다. 청년들은 길은 스스로 찾을 테니 공정한 운동장에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리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2020.4.1.).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달리게 하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2030으로부터 되레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역설을 낳고 있다. (...)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시적 세금 일자리는 청년도 기업도 원치 않는다. 강성 노조의 기득권 보호와 고용 유연성 실종은 청년 일자리를 죽이는 주범이다. 친(親)노조, 반(反)기업 정책으로부터의 근본적 전환이 절실하다.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는 2030의 절망에 그치지 않는다. 지식과 경험의 단절로 인해 국가 미래(未

來)까지 미치는 죄악이다.”

〈문화일보 (2021.4.13.) 사라지는 청년 정규직...2030 절망 넘어 국가未來 망친다.〉

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의는 담론적 실천 차원에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기존 시스템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특정 집단, 주로 기득권 집단에 의해 의미의 체계적 왜곡이 일어나는 현상을 ‘담론적 폐쇄’라고 부른다(김정희, 2020, 30쪽). 담론적 폐쇄 전략은 당면한 사안에 대한 대안적 해석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을 가로 막고, 특정 집단의 주장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미 기득권을 확보한 이들이 파편적인 사실을 내밀며 ‘불공정하다’고 외치고 자신을 ‘약자’나 ‘피해자’로 자리매김하는 서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권력 관계를 오인하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실제로 경험적 연구 결과는 한국인들이 체제 정당화의 작동 기제인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체제 정당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재분배에 대한 지지를 낮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김태심, 2020, 157쪽). 여기서 체제 정당화란 실존하고 있는 상황을 당위적인 상황으로 해석하는 경향으로, 대중들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경제 체제가 공정하다고 믿는 데 중요한 동기로 작동한다. 이처럼 한국 대중들의 능력주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은 불평등을 인식하더라도 더 자격 있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을 공정한 자원 배분의 과정으로 받아들여게 만든다. 이러한 체제 정당화 기제가 작동하면 차별과 착취, 승자독식과 자원집중 구조로 인해 저소득층에 머무는 사람들조차 현재의 경제 체제가 공정하다 믿게 되고, 가난한 자신과 동료 집단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되며 구조적 차별에도 둔감해진다(김태심, 2020, 135-136쪽).

지식이 언제나 권력을 동반한다는 푸코의 권력/지식 이론에 따르면, 진리·권력·지식, 세 가지는 복잡하게 뒤얽혀 있으며 이것들은 언제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권력을 위해 봉사한다(Mills, 2003/2008, p. 156). 주로 권력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진리나 진실이라 부르는 것은 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전략을 통해 구성되고 진리로서의 위치를 유지한다. 이때 각각의 전략은 해당 진리와 경쟁하거나 대립 관계에 있는 다른 대안적 지식을 배제하고 또 공격함으로써 선택한 진리를 뒷받침한다. 규범화된 언술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담론 역시 마찬가지로, 학문과 저널리즘 등 일반적으로 공공적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분야에서도 어김없이 지배 권력은 작동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석해야 할 것은 바로 지식과 진리를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

방식이다(Mills, 2003/2008, p. 149). 공정 담론 속에서 작동하는 지배 권력도 마찬가지이다.

6. 권력 정쟁 수단으로서의 공정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에서 공정과 관련해 중층적인 논의가 펼쳐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과 진영 간에 정쟁으로 소비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각 정치 진영의 의제와 정파성에 따라 전 국민적 갈등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학생들이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이 조국 전 장관을 반대하는 서명과 지지하는 서명을 각각 발표하기도 했다. 이 사태를 지켜보는 수많은 시민들마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라져 찬성과 반대의 대규모 집회를 여러 차례 여는 등 온 나라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언론이 공중들에게 제대로 된 사실과 맥락, 관점을 제공하고 풍부하고 심층적인 공정 담론을 제시했느냐는 물음에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단편적 사실 보도 관행, 검찰 취재원 의존 관행, ‘아미’ 집착 관행, 그리고 과도한 단독 경쟁 관행에 따라 함량미달이거나 편향된 보도로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박영흠·이정훈, 2020, 57-58쪽). 언론의 이와 같은 행태는 공론장에서 교육 불평등과 공정 담론이 더 알파하고 납작한 것으로 다뤄지는 데 기여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둔 2017년 초 이후 처음이다. 국민이 대통령 한 명에 대한 분노를 선거 때까지 억누를 수 없어서 거리에서 외쳐야 하는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입만 열면 촛불 혁명으로 태어났다고 자화자찬해온 정권, 전 정권이 쌓아 놓은 적폐를 쓸어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공정 평등 정의의 나라를 만든대던 대통령이 2년 반 만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무능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상식을 갈아뭇개고 파렴치 인물을 비호하기까지 했다.”

〈조선일보 (2019.10.4.). 상식 배반 대통령 한 명이 불러일으킨 거대한 분노.〉

“대다수 청년들에겐 어쩌면 ‘불법’보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불평등이 더 절망적일지 모른다. 청년전태일에 글을 보내온 한 청년이 “원래 그렇고 그런 놈들인 정치인이 저지른 불법보다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 이 사실은 더 아득하게 느껴졌다”고 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조 장관 임명 논란 과정에서선 이런 목소리보다 ‘합법’이나 ‘불법’이라는 논쟁과 ‘진영 간 대결’ 측면만 부

각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겨레 (2019.9.12). '조국 논란' 보는 청년세대 박탈감 직시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과제에 들이는 집중력에 비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부동산과 주거개혁 등 사회 경제개혁, 민생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처음부터 지지부진한 분야도 상당수 있었다”며 비판적 평가를 내렸다. 간단히 요약하면, ‘권력 다툼에 과도하게 집중하느라 민생 문제를 소외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공정 담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같은 행태를 보인 언론에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즉 언론이 공정이라는 의제를 우리 사회 공공선과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루기 보다 정치 갈등과 권력 투쟁의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대다수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구조와 체계 속 공정 담론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언론의 경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객관성, 중립성, 균형성을 그 자체의 속성이자 사명으로 갖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중의 주요 의제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다. 특히, 이 같은 모습은 보수신문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행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고, 정권이 주창하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그 구성원의 부정행위 또는 모순적 행태로 인해 무너지는 상황을 비판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일이 공정의 가치를 되살려 정권과 사회 공동체를 본질적, 구조적으로 성숙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증오와 과장의 언어를 통해 대통령 개인이나 정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공정 담론이 활성화되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론장에 정권 자체를 증오하고 굴복시키고자 하는 언어만이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공정 담론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다음 사설과 같이 “추 장관 아들 사건(병역특혜 의혹)”을 지적하며 정부의 “기존의 정책 오류 인정”과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지칭하는 것인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양자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정 담론을 단순한 정권 비판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의 개인 비리 의혹을 단순 열거하며 사회 전체의 공정 가치를 논하는 것 역시 정파적 관점에서의 정권 비판 이상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공정 담론이 그저 정권 공격 수단으로 편의적으로 활용되는 데 그친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공정성 훼손의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그동안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던 검찰 수사팀을 질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리를 약속했어야 마땅하다. 이와 더불어 관념적 공정론과 평등론에 사로잡혀 오히려 기회의 문을 훼손한 기존의 정책들에 대해 진솔하게 오류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을 해야 청년들의 신뢰가 돌아올 것이다.”

〈동아일보 (2020.9.21.) 37면 외친 대통령의 ‘공정’ 다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은 일반 병사들은 상상할 수 없는 휴가 특혜를 누렸다.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 불렀다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명백한 비리 의혹이 적발됐지만 정권 실세들이 모두 나서 무마해 줬다. 오히려 자리 영전까지 시켰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돈을 챙기더니 배지까지 달았다. 그러면서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에다 직원 임금 체불과 대량 해고 사태까지 일으켰지만 수사도 제대로 안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선거 공보물에 명백한 허위 사실을 넣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혐의로 고발당한 다른 의원 14명은 기소되고 이 중 8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경쟁 야당 후보가 공천 받는 날 경찰이 그 사무실을 덮쳐 압수 수색을 했다. 이게 문제인식 공정인가.”

〈조선일보 (2021.3.11.) 불공정 난장판 만든 文이 “공정” 운운, 공정 가치에 대한 모독.〉

한국 언론의 극단적 정쟁 행태는 한국 정치 체계와 미디어 체계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정치 병행성’을 보이는 특징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언론의 정치 병행성이란, 언론 내용이 갖는 이념성, 언론과 정당의 인적·조직적 연계성, 언론 수용자와 정당 지지자의 중복, 언론인의 역할 및 실천과 정당 노선과의 일치성 등 언론 문화와 형식이 정치와 관련되는 정도를 말한다(이준웅·조항제·송현주·정준희, 2010, 116쪽). 이때 한국형 정치 병행성은 ‘언론의 정치 체계에 대한 지배 강화’로 요약된다. 즉 1987년 이후 민주화 이행기 한국 언론은 취약한 정당과 시민 사회를 대신해 정파적 편향성을 동원하고 특정 갈등을 사유화하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주요한 행위자로 기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언론 지형은 극단화된 다원주의 모형이 강화돼 이념적 양극화와 대립만 가속될 뿐, 다양한 사회 집단과 정치 세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합당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준웅 외, 2010, 126쪽).

서구 저널리즘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정파성이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는 것은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이 갖는 고유한 성격, 즉 이항대립적 현실 규정, 집합적 영광의 형성, 도덕공동체의 창조라는 '의례적' 성격 때문이기도 하다(박영흠·김균, 2016, 203쪽). 현재 한국 저널리즘의 극단적 정파성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도출된 이념과 노선보다는 비합리적인 감정과 도덕에 기반을 둔다. 즉, 어느 한 쪽이 무조건 옳고 다른 한 쪽은 잘못했다는 이분법적 선악 구도에서 반대 진영은 논리적 근거에 따른 이성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사실 왜곡이나 축소, 과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정적 공격과 악마화의 대상이 된다(박영흠·김균, 2016, 203쪽). 이러한 감정적이며 도덕적 정파성은 공동선을 위한 타협이나 합의의 여지를 두는 공통된 영역이나 중간 지대를 허락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언론 간 쟁투는 극단으로 치닫고 서로를 굴복시키기 위한 증오의 대결이 되고 만다.

사회적 실천을 유기적이며 효과적으로 추동하는 담론적 실천 차원에서 한국 언론은 극단적 정치 병행성과 정파성으로 인해 다원적이고 복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공정 담론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즉 언론이 공정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핵심과 구조에 다가가기 보다는 정치 갈등 및 권력 투쟁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내용을 취사선택하고 제 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왜곡하면서 공론장을 혼탁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능력주의와 절차적 공정에 더해 우리가 다차원적으로 고려해야 할 공정은 무엇이 있는가', '이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은 공론장 무대 중심에 오르지 못했다. 가장 필수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회적 담론이 오히려 소외되고 배제되고 만 것이다.

이처럼 담론의 체계적 왜곡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특정 집단이나 목표를 향해 영향을 끼치게 될 때, 이를 '담론이 무기화(weaponization)'되었다고 표현한다(김정희원, 2020, 31쪽). 한국의 공정성 담론 역시 공정 개념을 자의적이며 적극적으로 프레임(framing)하고 상대 진영의 논리를 선별, 왜곡해 공격함으로써, 권력 관계를 은폐하거나 합리적 논의 및 합의의 가능성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담론적 무기로써 기능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같은 무기화 전략을 통해 공정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거나 또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좌절시키는 수단으로 전략한다. 이는 성숙한 토론과 합의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병리적 현상이며, 민주적인 시민 참여를 확보하는 공론장의 형성을 막는다(김정희원, 2020, 31-32쪽).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관련한 공론장 역시 이진투구의 장으로 전략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공정 원칙을 논의할 기회는 대폭 좁아지고 말았다.

향후 공정 담론은 시민의 일상과 관심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정치적 갈등'에 대한 담론 역시 보다 생산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이들이 건전하게 경쟁하고 선 순환하는 가운데, 정치 개혁,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재벌 개혁, 언론 개혁과 같은 거시적 권력 갈등이 제대로 다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청년들의 공정 담론에 대해 “자기 이해와 무관한 것에는 굳이 분노하지 않는 ‘선택적 공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정의와 공정에 대한 거대 담론이 개인의 삶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여기는 청년들이 “공정이란 프레임을 가져와서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한겨레, 2021.6.12.). 그러므로 시민 개개인의 문제가 공론장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어떤 약자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을 때, 비로소 국가 권력 차원의 거시적 문제 역시 시민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 전근대성의 유산, 그리고 신 세습주의

“이 대표는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공정한 기회를 통해 경쟁할 토대가 만들어졌다면 결과물과 성과도 공정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에 기반한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이라고 거듭 밝혀 왔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 등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그가 정치철학을 공유한다는 유승민 전 의원과도 다르다. 문 정권 4년여 간의 경제정책은 반시장 친노동 일색이었다. 그 결과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청년은 일자리 절벽에 내몰렸으며, 자영업자 저소득층 경제는 더 황폐해졌다. (...)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토대로 한 시장 시스템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분배도 시장을 통해야 가장 공정하다. 이것이 올바른 경제 개혁의 방향이다.”

〈문화일보 (2021.6.14.) ‘시장 통한 분배’ 이준석식 공정경쟁 주목한다.〉

2021년 6월 11일에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6살의 0선 청년 정치인 이준석이 당대표로 선출된 것은 보수 진영의 생존과 변화의 열망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가 당선 직후 수락연설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변화로 강조한 것은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의 구체적인 설계와 토론배틀, 연설대전을 통한 대변인단의 ‘공개경쟁선발’이었다. 이를 통해 정치활동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정치 무대에서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시행한 여성, 청년, 지역 할당제 역시 불공정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돌풍과 그의 정치적 소신은 공정의 다차원적 복잡성과 관련해 여러 숙제를 남겼다. 우선 주목할 것은 이 현상이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공정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평원칙과 절차적 공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전근대성의 유산이

남아있다는 현실을 상기시킨다는 것이다. 즉, 정치권에서 기득권과 가까운 연줄과 뒷배로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이 할람미달의 인사가 정치 무대에 등장하고 사라지는 역사가 바로 ‘토론패들’과 같은 공약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이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야. 너네 부모를 탓해”라고 말한 것처럼, 권력을 매개로 한 부정부패로 일정한 기회와 성과를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스펙 만들어주기’처럼 일종의 반칙과 변칙으로 자본과 지위를 세습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은 대중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수준의 능력주의라도 제대로 실현되면 좋겠다는 열망을 낳도록 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능력주의가 전근대적 귀족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을 기억한다면, 아직 한국 사회 곳곳에 최소한의 근대성마저 확보하지 못한 후락한 영역에 있어서는 단순한 능력주의조차 중요한 개혁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은행들의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분노가 치민다. 은행 임원이 자신의 자녀 면접에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자녀가 고득점으로 합격한 것은 불문가지다. 계열사 사장이나 현직 지점장, 최고경영진 관련 사무직 직원의 자녀 인성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자 간이 면접을 통해 정성평가 최고 점수를 줘서 합격시켰다. 채용 인원을 임의로 늘려 정치인 자녀를 최하위로 합격시킨 사례도 있다. 사외이사 임직원 거래처의 자녀 지인 명단을 별도 관리하면서 전형 공고에 없던 ‘글로벌 우대’ 요건을 신설하거나 면접점수를 높게 줘 합격자를 뒤바꾼 사례도 많다. 현대판 음서제와 다를 바 없다.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꿈과 기회를 박탈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국민일보 (2018.1.29.) 채용비리 은행 공개하고 합격 취소하라.〉

“지난해 청년실업률(9.9%)과 체감실업률(22.7%)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꿈을 빼앗은 채용비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자 사회악이다. 관행처럼 반복돼 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를 공개하고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해야 한다. 이번에는 법이 없어 청탁한 사람을 공개하지 못하는데, 관련법을 제정해 공개하고 청탁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힘 있는 자, 가진 자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채용비리까지 횡행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동아일보 (2018.1.30.) 공공기관 1190곳 중 946곳, 청년 꿈 삼킨 ‘채용비리 공화국’〉

그러나 전근대성을 혁파하기 위한 능력주의를 옹호하며 ‘사회적 약자 할당제’처럼 능력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까지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다원적 공정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가

로막는 퇴행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직 한국의 정치 지형과 공적 영역에서 남성과 중장년, 명문대 출신 등 주류 기득권의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며, 여성, 청년, 비명문대, 그 외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할당제는 구조적으로 균등한 기회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열어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길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교육 시스템에서 시장 가치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대생과 비대학진 학자,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유무형의 차별을 당하는 여성, 그밖에도 다양한 소외와 배제 속에 놓인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와 같은 이들은 거대한 불공정에 갇혀 움짱달짱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일차원적 능력주의를 다시금 유일한 공정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일은 어차피 사회구조적 불공정은 바꿀 수 없고 바꾸고 싶지도 않으니 그 속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하며 살 길을 찾으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한 예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차별적 상황을 보면,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은 57명, 19%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여성 의원 비율이 평균 28.8%(2017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을 비춰보면 매우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낮은 여성 의원 비율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합리적 명제는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더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다”가 아니라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정치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아닐까(장혜영, 2021.7.9.). 이런 현실에서 여성의 진출이 미비한 영역의 적극적 우대조치를 막는 것은 분명 공정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한편, 전근대적 세습주의 극복 수단으로서의 능력주의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신 세습주의’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사실 역시 지적할 만하다. 능력주의의 정당성 및 비판논의에서 늘 등장하는 논점으로 각기 상이한 개인, 사회, 국가 등에서 이 규범을 적용하는 방식과 집행수단이 문제인가, 아니면 능력주의 자체에 결함이 있는가 하는 점이 있다(이시철, 2020, 15쪽). 만약, 전자가 옳다면 이상적인 능력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 하지만 후자가 옳다면, 능력주의의 근본적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보완할 대안 원리를 사회적으로 모색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비록 능력주의가 선한 의도로 시작됐다 하더라도, 이 이념이 형성한 사회적 결과에 따라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적 이동성이 제한되며, 무엇보다 특권의 세습이 되풀이되면서 새로운 신분제가 고착화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나름대로 공정 담론이 진화하는 가운데 능력주의의 한계와 단순한 공정 원칙을 극복하지는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 결론이 ‘이상적 능력주의’ 실현이라는 쪽으로 이르는 데 있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가령, ‘공정’을 앞세운 청년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 공정 담론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언

론 공론장에서는 외부 필진의 칼럼 중 공정의 다원성과 복잡성을 인식하고 공정에 ‘평등’과 ‘정의’의 요소를 고려하지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이 ‘열린 능력주의’, ‘제대로 작동하는 능력주의’라는 표현을 통해 끝내 능력주의의 이상을 이루기를 바라는 모습이 목격되곤 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는 운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대학의 지역 인제 균형 선발이 정당화되는 이유다. 공정 경쟁의 형식만을 중시하는 이준석의 ‘단한 능력주의’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 경쟁을 토대로 정의를 추구하는 ‘열린 능력주의’로 대체되어야 한다. 나아가 열린 능력주의는 롤스(J Rawls 1921~2002)의 통찰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등(差等) 원리 (Difference Principle)’를 수용해야 한다. 인권 선진국에서 약자 우대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 온 데는 철학적 현실적인 이유가 엄존한다. 이준석의 비판과는 달리 여성할당제 청년할당제는 정당한 차등 원리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윤평중 (2021.6.25.) 열린 능력주의가 옳다, 조선일보〉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위 계층의 공고한 성안에 들어가는 좁은 성문을 통과하는 데만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성 안팎 모두에게 공정과 능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 고소득층의 몫이 과연 정말로 그들의 능력과 공정한 경쟁에 기초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이는 부자들이 장악한 정치와 독점과 기득권의 지대 추구에 대한 비판, 그리고 과도한 연공급으로 대 표되는 임금 구조와 공공 부문의 개혁에 관한 논의들로 이어져야 한다.”

〈이강국 (2021.6.29.)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 한겨레〉

그러나 강준만(2016)은 능력주의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상 귀족주의와 다를 바 없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능력주의의 단계는 1단계 귀족주의 반대말로서의 능력주의, 2단계 교육과 시험평가에 의한 능력주의, 3단계 ‘교육세습’의 영향을 받는 능력주의, 4단계 ‘승자독식’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능력주의는 결국 양극화와 세습이 심화돼 “변형된 세습적 귀족주의”로 변질되고 마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 역시 이미 이 단계에 이르렀다고 그는 주장한다(강준만, 2016, 329-330쪽).

이에 따르면 부정과 부패, 반칙과 변칙을 제거하고 심지어 출발선마저 같도록 조정해 완벽한 공정 절차를 거쳐 제대로 능력주의를 실천한다 하더라도, 그 사회는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

로 세습주의로 회귀하고 만다. 설사 한 두 세대 동안 역동적인 계층 상승과 사회 이동이 벌어진다 해도 점차 벌어지는 격차의 흐름을 막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 담론과 관련한 사회적 실천 차원에서 우리는 능력주의 자체가 지닌 내재적 맹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능력주의 원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그 모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대안 및 보완책을 찾는 것과,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완전한 능력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차이를 갖는다.

8. 나오며: 보다 생산적인 공정 담론을 위해

공정 담론은 시민사회에서 사회갈등 해결의 중요한 기초로 기능할 수 있고, 오히려 갈등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이희정, 2018, 127쪽). 공정이 사회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정의 다차원적인 속성, 즉 형평(equity), 균등(equality), 필요(need), 절차(procedure) 등 다양한 공정성 원칙이 존재하고 이를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 또는 조합하느냐에 따라 자원 배분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의 불공정 인식이 커질수록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불공정이 더 증가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공정에 대한 진지하고 체계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정의와 평등에 기반해 최적합한 공정이 무엇인지 합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중, 특히 청년들이 능력주의와 절차적 공정에 몰두하는 이유는 바로 ‘헬조선’, ‘N포세대’, ‘이생망’이라는 조어들에서 드러나듯 극심한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다. 즉 부와 지위의 세습, 극심한 병목과 경쟁,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는 차별과 소외, 배제 시스템, 그로 인한 절망은 여전하지만, 개혁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일자리, 부동산 등에서 전근대적이고 신 귀족주의적인 구조적 모순이 개선되거나 그러한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가치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이 처참한 ‘전쟁터’이고 상위 몇 퍼센트만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면, 거기에 편입되기 위해 능력과 노력이라는 선발 기준과 그 과정의 객관성,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개인의 존엄성이나 개성, 조건과 배경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치스럽거나 한가한 일이 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의 일면적인 능력과 공정을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의미 있는 가치나 규범으로 여길 수 있을까? 그것은 오히려 거대하고 구조적인 불공정과 부정의에 복무하는 데 불과한 것은 아닐까? 개인이 전쟁터를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전쟁을 끝내는 것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념’하지 않는 것이다. 체계와 구조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불공정’을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공동체적 믿음이 없다면, 구성원이 절차와 형식에 매몰된 ‘지엽적 공정’, 혹은 ‘형해화한 정의’에 몰두하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 사회의 공정 담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명문대, 대기업, 정규직, 강남 아파트에 진입하기 위한 전쟁을 끝낼 것인가’로 모아져야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학벌, 저소득 계층의 구성원들은 교육과 노동의 기회, 과정, 결과 등 모든 영역에서 구조적이고 다차원적인 불공정에 처해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차이로는 기존의 불평등은 고스란히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교육 기회의 불공정’이 된다. 또한, 명문대에 유리한 기준을 활용한 획일적 평가에 따른 승자독식 방식의 역진적 자원 배분은 바로 비명문대생에 대한 ‘교육 과정의 불공정’이 된다. 교육의 성과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에서도 불공정은 이어져, 채용 시 알게 모르게 학벌을 차별하는 행태는 ‘노동 기회의 불공정’이 되고, 임금, 승진, 복지, 고용안정성에서의 과도한 격차 역시 개인과 기업의 특성 차이에 불공정 거래, 착취, 차별이 버무려진 ‘노동 과정 및 결과의 불공정’이 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는 ‘(절차적으로) 공정(시험 등)’하면 ‘불평등은 당연하다(심지어 클수록 좋다)’는 공정성 인식이 널리 퍼져있지만, 교육 및 노동 기회·과정·결과는 모두 구조적으로 공정하지 않으므로 불평등도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능력주의’,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자원 배분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곧, ‘능력주의’와 ‘절차적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승리자로 관명된 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패배자로 여겨지는 자에게는 턱없이 적은 몫을 나눠주는 구조를 타파하는 논의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능력과 노력에 따른 기회 및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인재 선발과 보상, 복지 지원 시스템을 보다 공공적인 방향으로 개혁해 불합리하게 벌어지는 격차를 줄이고 상대적 약자에게 더 안정된 기회와 자원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이제껏 제대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지방대생 및 대학 미진학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이제라도 ‘공정한’ 지원과 보상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해야 한다. 이들도 상위 능력자 못지않은 적절한 지원을 받고 삶의 과정에서 제2, 제3의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공정 담론은 소수 상위권에게 모든 지원과 자원을 몰아주고 중하위권은 버려두는 교육 시스템, 노동시장에서의 과도한 임금 및 고용안전성 격차, 비정상적인 욕망과 투기 현장이 된 부동산 제도 등에 숨어 있는 구조적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생산적 담론이 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에 따른 평면적 자원배분이 아니라 보다 공공적이며 합리적인 다차원의 자원배분 원리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은 공정의 가치마저 엘리트의 권력 정쟁에 활용하는 행태를 보일 것이 아니라, 계급, 지위, 교육 수준, 성별, 지역, 장애 등에 따라 자원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분배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례로 정치권력을 다루는 보도나 사설이라 할지라도 그들만의 '권력 게임'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권력 집단의 '의무'와 '실천'에 보다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최근 공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 담론의 사회적 질료(質料)가 되는 언론 보도의 수준이 지금처럼 저급하고 파편적인 수준에 머문다면 우리 사회 공정 담론의 성숙과 이에 따른 사회적 실천의 속도는 더욱 더더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곧 '공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라는 시민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대한 질문이며,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정 담론은 사회 구성원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치열하게 상징 투쟁을 벌이는 장이며, 여기서 협의된 공정 개념에 따라 정치적, 사회경제적 권위와 정책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만큼 현재의 공정 논의가 단순하고 기술적인 개념으로 환원되거나 국가적 위상이나 사회적 성숙도에 비추어 퇴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을 비롯한 공론장에서 공정의 다차원성과 복잡성이 보다 충분히 논의되고, 구조적, 포괄적, 총체적인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

References

- Choi, W. H. (2019, November 28). From the current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non-curricular' and 'self-introduction' will be abolished, when they enter the university. *The Hankyoreh*, p.3.
- Chun, G. Y. (2018, March 5). 'A counterattack of fairness' that shook the Moon Jae-in government. *Sisain* 546.
- Chung, J. (2016). A Study on the Distributive Justice of John Rawls and its applicability to South Kore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50(2), 75-101.
- Hwang, G. S. (2018). *Justice theory of John Rawls*. Seoul: Sam & parkers.
- Hong, S. J. (2021, June 12). The 'trapped generation' who the wealth and their status are passed down... Born in the 90's, can't they be angry?. *The Hankyoreh*, pp.3-4.
- Jang, G. H. (2019).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of Korea's Employment Structure. *BOK economic analysis*, 25(1), 66-122.
- Jang, H. Y. (2021, July 9). The quota of women is a means, not a goal. *The Women's News*.
- Jeon, H. W. (2020, September 28). How 'fairness' became their weapon. *Sisain* 680.
- Jung, E. H. (2009). Korean Workers' Perception of Just Distribution of Wages and Its Determinants,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15(1), 191-218.
- Jung, J. H. (2016). The 'N-Po(N-Giving Up)' Generation of the 'Hell-Chosun' and Justice Theory of Effort. *Culture/science*, 86, 132-154.
- Jung, W. S. (2011). Theory of Justice and Conditions for Fairness. *Philosophy and reality*, 88, 22-34.
- Kang, J. M. (2016). Why Does Even Having Wealthy Parents Become an Ability? :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Meritocratic Communications', *Journal of Social Science*, 55(2), 319-355.
- Kim, B. C. (2018). The Problem of Social Justice in Meritocracy.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73, 173-205.
- Kim, B. S. (2010). A Multidimensional Review of Inequality and Fairness: The Case of Sociological Theory. *Proceedings of the Sociology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965-982.
- Kim, B. S. (2020, July 14). What is 'fairness'?. *The Hankyoreh*. p.25.
- Kim, C. G. (2015). Limitations of the mainstream fairness model of allocation of the college opportunity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inequality and exploration of alternative fairness model.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5(4), 1-24.

- Kim, D. K. (2020). *What is justice in Korean society?*. Paju: Acenet.
- Kim, M.-Y. (2009). The Communitarian Deconstruction of Meritocracy - Complex Equality of Merit, Desert and Need. *ECONOMY AND SOCIETY*, 256-277.
- KimJung, H. W. (2020). Ideology of fairness, it is time to seek for alternatives beyond mere problematization. *HWANGHAE REVIEW*, 24-43.
- Kim, S. G. (2016). The Cultural Politics of Discursive Construction of Younger Generation : Critical Analysis on the Discourse of Younger Generation since 2010. *Media & Society*, 24(1), 5-68.
- Kim, S. J., Ryu, K. K., Son, S. J. (2015). Parental Wealth, Children's Ability and Entering Prestigious Colleges. *KOREAN ECONOMIC JOURNAL*, 54(2), 356-383.
- Kim, S. Y., Park, M. J. (2021). *The barrier society :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of youth inequality* (Policy report 326). The Seoul Institute.
- Kim, T. (2020). Fair Inequality?: System Justification and Redistribution Preferences. *Peace Studies*, 28(1), 129-167.
- Kim, Y., Ham, S., Kim, Y., Choi, J. (2017).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a Social Issue : Focusing on the THAAD Deployment Big DataAnalysis. *Communication Theories*, 13(4), 40-91.
- Kim, Y. T. (2018). Inequality and Ideology : A critique of three discourses of merit, competition and diffus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67, 33-72.
- Lim, H. S. (2021). *Analysis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universities* (report on issues No.22). Korea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Korea Labor Institute (2018). All-round system improvement plan to resolve income inequality and wage gap.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Lee, C. H. (2016). The Limits of Liberal Justice. *Journ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86, 309-327.
- Lee, G. (2015). Exploring Social Justice as a Mechanism of Reducing Social Conflict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9(4), 27-51.
- Lee, G. G. (2021, June 29). Fair competition and meritocracy. *The Hankyoreh*. p.27.
- Lee, H. J. (2018). An Analysis on the Change in the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Youth and Its Effect on Perception toward Justic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2(3), 119-164.
- Lee, H. J. (2019). Analysis of Media Discourse on Fairness of Educ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3), 853-882.

- Lee, J. Y. (2019). A discourse analysis of child care policy in newspaper editorials. Unpublisheddoctoraldissertation, Ewha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C. (2020). Contemporary Issues in the Meritocracy Debate. Presentation at the 24th KIPA Public Leadership Seminar,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57.
- Lee, W. P. (2005). Direct Quotations in Newspaper Editorials: A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Bakhtin's Dialogicality. *Discourse and Cognition*, 12(2), 117-151.
- Lim, C. Y. (2021, July 19). Generational theory has become politics. *The HanKook Ilbo*. p.27.
- Markovits, D. (2019). *The Meritocracy Trap: How America's Foundational Myth Feeds Inequality, Dismantles the Middle Class, and Devours the Elite*. Penguin Press.
- McNamee, S. J., Miller Jr, R. K. (2004). *The Meritocracy Myth*.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Mills, S. (2003). *Michel Foucault*. Routledge.
-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2021, May 6). *Four year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 evaluation report on the 100 national tasks and reform legislation in 6 areas*.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0, April 22). '2019 Labor Status Survey by Employment Type' press release.
- Moon. Y. M. (2019). Wage Gap and Determinants of Large and Small Enterprises.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42(1), 43-72.
- Nam, M. J., Bae, J. H., Oh, S. K. (2019). Reconsideration of Educational Fever, Meritocracy, and Educational Fairness: focusing on the discourse analysis of drama "SKY castl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31-167.
- Park, H. M. (2019). Beyond meritocracy: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to meritocracy. Proceedings of the Sociology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539-550.
- Park, H., Kim, S. (2015). The Multi-dimensionality of Theories of Justice. *Society and Theory*, 219-260.
- Park, K. I. et al. (2020). *Meritocracy and Inequality*. Seoul: communebut.
- Park, Y. H., Lee, J. (2020). Problems of routines in reports on Cho Kuk's appointment as Justice Minister. *Locality & Communication*, 24(1), 36-69.
- Park, Y., Kim, K. (2016). Journalism as a Ritual : For a New Understanding of Partisan Journalism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0(1), 202-228.
- Rawls, J. (1999). *A Theory of Justice*(Revised Edition). Belknap Press: An Imprint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Rhee, J. W., Cho, H. J., Song, H. J., Jung, J. H. (2010). A Comparative Systematic Approach to Media System: the Korean Case. *Communication Theories*, 6(1), 87-143.
- Sandel. M. J. (2020).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Farrar, Straus and Giroux.
- Shin, J. W. (2011).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Critical-Emancipatory Science. *ECONOMY AND SOCIETY*, 89, 10-45.
- Shin, J. W., Cho, E. H. (2020). Realities of Generational Cleavages, Representations of Generational Discourse : A Qualitative Discourse Historical Analysis of the Genealogy of Discourses on Inter-Generational Inequalities. *Civil Society and NGO*, 18(1), 49-99.
- Statistics Korea (2020, January 22). '2018 Wage Labor Job Income Results' Press Release.
- Sung, S. Y., Jung, Y. D. (2012). Causes that Raise Fairness Issues in Korea. *Journal of Social Science*, 23(2), 93-114.
- The Chosun Ilbo (2018, October 27). Under pressure from the KCTU, the open recruitment rate was 1.5%, Blockade of youth employment. *The Chosun Ilbo*, p.31.
- The Chosun Ilbo (2019, October 4). A great anger provoked by one treacherous president. *The Chosun Ilbo*, p.31.
- The Chosun Ilbo (2019, October 14). Young people who are angry that the 'Jo-Guk situation' is a 'justice' issue, not a 'camp'. *The Chosun Ilbo*, p.35.
- The Chosun Ilbo (2020, June 27). Justice and justice being teased by government officials at puns. *The Chosun Ilbo*, p.31.
- The Chosun Ilbo (2021, March 11). Moon, who made an unfair mess, says "fair", profanity against fair values. *The Chosun Ilbo*, p.35.
- The Dong-A Ilbo (2018, January 30). 946 out of 1190 public institutions, 'Republic of Recruitment Corruption' that swallowed the dream of youth. *The Dong-A Ilbo*, p.31.
- The Dong-A Ilbo (2020, April 1). Let the youth run without fear. *The Dong-A Ilbo*, p.35.
- The Dong-A Ilbo (2020, September 21). The reason why the president's promise of "fairness", which he shouted 37 times, sounds in vain. *The Dong-A Ilbo*, p.35.
- The Hankyoreh (2019, September 12). We need to face the feeling of depriva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who see the 'Jo-guk controversy'. *The Hankyoreh*, p.23.
- The JoongAng Ilbo (2020, June 26). It should not be misleading by saying, "Why is it bad to become a

full-time employee?”. *The JoongAng Ilbo*, p.30.

The Kukmin Ilbo (2018, January 29). Disclose 'employment corruption' banks and cancel admission. *The Kukmin Ilbo*, p.23.

The Kyunghyang Shinmun (2020, January 1). We wish for a fair society without privilege and discrimination. *The Kyunghyang Shinmun*, p.31.

The Munhwa Ilbo (2021, April 13). The disappearing young regular workers... Beyond 2030 despair, ruin the future of the country. *The Munhwa Ilbo*, p.31.

The Munhwa Ilbo (2021, June 14). 'Distribution through the market' We pay attention to fair competition argued by Lee Jun-seok. *The Munhwa Ilbo*, p.31.

Woo, M. S., Nam, E. Y. (2021). Meritocracy as Justice Rule and Inequality Perception :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64(1), 201-244.

Yoon, P. J. (2021, June 25). Open meritocracy is right. *The Chosun Ilbo*. p.30.

최초 투고일 2021년 8월 05일

게재 확정일 2021년 9월 28일

논문 수정일 2021년 10월 07일

부록 I. 참고문헌

- 강준만 (2016). “왜 부모를 잘 둔 것도 능력이 되었나?: ‘능력주의 커뮤니케이션’의 심리적 기제.” 〈사회과학연구〉, 55권 2호, 319-355.
- 김도균 (2020).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파주: 아카넷.
- 김미영 (2009). 능력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해체. 〈경제와 사회〉, 256-277.
- 김범춘 (2018). 메리토크라시에서의 사회정의의 문제. 〈통일인문학〉, 제73집, 173-205.
- 김봉석 (2010).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다차원적 검토: 사회학이론의 경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회 논문집, 965-982.
- 김선기 (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언론과 사회〉, 24권 1호, 5-68.
- 김세직·류근관·손석준 (2015).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 〈경제논집〉, 54권 2호, 356-383.
- 김승연·박민진 (2021).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정책리포트 제326호), 서울연구원.
- 김영욱·함승경·김영지·최지명 (2017). 사회 쟁점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커뮤니케이션 이론〉, 13권 4호, 40-91.
- 김윤태 (2018). 불평등과 이데올로기. 〈한국학연구〉, 67권, 33-72.
- 김정희원 (2020). ‘공정’의 이데올로기, 문제화를 넘어 대안을 모색할 때. 〈황해문화〉, 24-43.
- 김천기 (2015). 사회적 불평등 맥락에서 본 대학입학 기회배분의 주류적 공정성 모델 한계와 대안적 공정성 모델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25권 4호, 1-24.
- 김태심 (2020). 공정한 불평등?: 체제 정당화와 재분배 선호. 〈평화연구〉, 28권 1호, 129-167.
- 남미자·배정현·오수경 (2019). 교육열, 능력주의 그리고 교육 공정성 담론의 재고(再考): 드라마 〈SKY 캐슬〉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31-167.
- 문영만 (2019).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및 결정요인. 〈노동경제논집〉, 42권 1호, 43-72.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1.5.6.).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 박권일·홍세화·채효정·정용주·이유림·이경숙·김혜진·김혜경·문종완·공현 (2020). 〈능력주의와 불평등〉. 교육공동체벗.
- 박영흠·김균 (2016). 의례로서의 저널리즘. 〈한국언론학보〉, 60권 1호, 202-228.
- 박영흠·이정훈 (202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보도에 나타난 취재·보도 관행의 문제점.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4권 1호, 36-69.

- 박호민 (2019). 능력주의(meritocracy)를 넘어서 : 능력주의의 한계와 대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39-550.
- 박호민·김석호 (2015).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사회와 이론>, 219-260.
- 성시영·정용덕 (2012). 한국에서의 공정성 문제 제기 요인. <사회과학연구>, 23권 2호, 93-114.
- 신진욱 (2011).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통권 제 89호, 10-45.
- 신진욱·조은혜 (2020). 세대균열의 현실, 세대담론의 재현: 세대불평등 담론의 유래에 관한 질적 담론사 연구. <시민사회와 NGO>, 18권 1호, 49-99.
- 우명숙·남은영 (2021).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 한국과 일본의 비교. <아세아연구>, 64권 1호, 201-244.
- 이건 (2015). 사회갈등 해소 기제로서의 공정성 탐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권 4호, 27-51.
- 이시철 (2020). 메리토크라시 논의의 현대적 쟁점. 제24차 KIPA 공공리더십 세미나 발제문, 한국행정연구원, 1-57.
- 이원표 (2005). 신문 사설에서의 직접인용 : Bakhtin의 대화성 관점에서의 분석. <담화와 인지>, 12권 2호, 117-151.
- 이준웅·조항제·송현주·정준희 (2010). 한국사회 매체 체계의 특성: 민주화 이행 모형의 제안. <커뮤니케이션 이론>, 6권 1호, 87-143.
- 이지영 (2019). <신문사설에 나타난 보육정책 담론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충한 (2016). 자유주의적 정의의 한계. <철학논총>, 제 86집, 309-327.
- 이혜정 (2019). 교육 공정성에 관한 미디어 담론 분석: '숙명여고 사태'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0권 3호, 853-882.
- 이희정 (2018). 청년층 계층인식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학>, 52권 3호, 119-164.
- 임희성 (2021).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현안보고 통권 22호). 대학교육연구소.
- 장근호 (2019).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경제분석>, 25권 1호, 66-122.
- 정원섭 (2011). 정의론과 공정성의 조건. <철학과 현실>, 88권, 22-34.
- 정이환 (2009). 임금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노동자 의식과 결정요인. <산업노동연구>, 15권 1호, 191-218.
- 정정훈 (2016). 헬조선의 N포 세대와 노력의 정의론. <문화과학>, 86권, 132-154.
- 정진화 (2016). 존 롤즈(John Rawls)의 분배정의론과 한국적 적용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50권 2호, 75-101.

- 한국노동연구원 (2018). <소득불평등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제도개선 방안>. 고용노동부.
- 황경식 (2018). <존 롤스 정의론>. 서울: 쌤앤파커스.
- Markovits, D. (2019). *The Meritocracy Trap: How America's Foundational Myth Feeds Inequality, Dismantles the Middle Class, and Devours the Elite*. Penguin Press.
- 서정아 (역) (2020). <엘리트 세습>. 서울: 세종서적.
- McNamee, S. J., Miller Jr, R. K. (2004). *The Meritocracy Myth*.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김현정 (역) (2015). <능력주의는 허구다>. 사이.
- Mills, S. (2003). *Michel Foucault*. Routledge. 임경규 (역) (2008). <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 서울: 엘피.
- Rawls, J. (1999). *A Theory of Justice*(Revised Edition). Belknap Press: An Imprint of Harvard University Press. 황경식 (역) (2003). <정의론>. 서울: 이학사.
- Sandel, M. J. (2020).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Farrar, Straus and Giroux. 함규진 (역) (2020). <공정하다는 착각>. 서울: 와이즈베리.

부록Ⅱ. 보도기사 및 보도자료

- 경향신문 (2020.1.1). 특권과 차별 없는 공정 사회를 소망한다. <경향신문>, 31면.
- 고용노동부 (2020.4.22).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국민일보 (2018.1.29). 채용비리 은행 공개하고 합격 취소하라. <국민일보>, 23면.
- 김범수 (2020.7.14). '공정'이란 무엇인가. <한겨레신문>, 25면.
- 동아일보 (2018.1.30). 공공기관 1190곳 중 946곳, 청년 꿈 삼킨 '채용비리 공화국'. <동아일보>, 31면.
- 동아일보 (2020.4.1).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달리게 하라. <동아일보>, 35면.
- 동아일보 (2020.9.21). 37번 외친 대통령의 '공정' 다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 <동아일보>, 35면.
- 문화일보 (2021.4.13). 사라지는 청년 정규직...2030 절망 넘어 국가未來 망친다. <문화일보>, 31면.
- 문화일보 (2021.6.14). '시장 통한 분배' 이준석式 공정경쟁 주목한다. <문화일보>, 31면.
- 윤평중 (2021.6.25). 열린 능력주의가 옳다. <조선일보>, 30면.
- 이강국 (2021.6.29).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 <한겨레>, 27면.
- 임채윤 (2021.7.19). 정치가 되어버린 세대론. <한국일보>, 27면.
- 장혜영 (2021.7.9). 여성할당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여성신문>.
- 전혜원 (2020.9.28). '공정'은 어떻게 그들의 무기가 되었다. <시사인> 680호.
- 조선일보 (2018.10.27). 민노총 압박으로 공개 채용 1.5%, 청년 취업 원천 봉쇄. <조선일보>, 31면.
- 조선일보 (2019.10.4). 상식 배반 대통령 한 명이 불러일으킨 거대한 분노. <조선일보>, 31면.
- 조선일보 (2019.10.14). 조국 사태는 '진영' 아닌 '정의' 문제라고 분노하는 청년들. <조선일보>, 35면.
- 조선일보 (2020.6.27). 정권 인사들 말장난에 농락당하는 公正과 正義. <조선일보>, 31면.
- 조선일보 (2021.3.11). 불공정 난장판 만든 文이 "공정" 운운, 공정 가치에 대한 모독. <조선일보>, 35면.
- 중앙일보 (2020.6.26). '정규직화가 왜 나쁘냐'고 오도할 일 아니다. <중앙일보>, 30면.
- 친관울 (2018.3.5). 문재인 정부를 혼든 '공정의 역습'. <시사인> 546호.
- 최원형 (2019.11.29). 현 중2 대입부터 '비교과' 반영 앓고, 자기소개서 등 폐지. <한겨레신문>, 3면.
- 통계청 (2020.1.22). '2018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보도자료
- 한겨레 (2019.9.12). '조국 논란' 보는 청년세대 박탈감 직시해야. <한겨레신문>, 23면.
- 홍석재 (2021.6.12). 부도 신분도 대물림 '간헐 세대'...90년대 생 분노 안 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 3-4면.

불평등 사회 속 공정 담론의 다차원성 청년 공정 관련 신문사설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곽영신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류용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 연구는 촛불 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 이후 신문 사설에 나타난 청년 관련 공정 담론을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대표적인 사회 자원 배분 통로라 할 수 있는 교육과 노동 분야의 공정 담론이 언론 공론장에서 어떻게 다루지고 있는지 그 특성과 한계를 고찰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공정 담론이 각 계층 및 집단의 이익과 목표, 의제에 따라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는 양상을 바탕으로, 공정이 고정되거나 평면적인 개념이 아닌 복잡성과 다원성을 지닌 개념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 사회에서 공정 담론은 전형적인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돼 공정성의 형평 원칙과 절차적 공정을 극대화하고, 구조적 차별과 착취에서 오는 불공정을 은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언론은 상위 계층이나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공정 담론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조적인 불공정 해소가 아닌 기존의 경쟁을 통한 승자독식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언론은 공중들에게 풍부하고 심층적이며 중층적인 공정 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정치 진영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거나 이를 대변하면서, 관련 담론을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한국 사회에 잔존하는 부정부패, 변칙과 반칙이 만연한 전근대성으로 인해, 능력주의적 공정 담론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 시스템의 지속과 심화로 인한 신세습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이상적 능력주의에 대한 희망을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

핵심어 : 능력주의, 공정 담론, 공정 원칙, 불평등, 공론장